

2014학년도 송실대학교 논술 모의고사				
논술 모의고사 문제지(정상제)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주의사항(인문, 경상, 자연 공통사항)

- ①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마시오.
- ②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마시오.
- ③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하시오.
- ④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 ⑤ **검정색 필기구(블랙 또는 사인펜)**만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그 이외 색 필기구는 부정행위에 해당).

문제1 아래의 박스에 있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나],[다]에 나온 행위자들의 전쟁 참여 결정에 대해 논평하시오. (800 ± 80자, 40점)

*** 합리적 행위자 모델**

국제문제란 기본적으로 하나의 국가 혹은 중앙정부가 선택한 행동이다. 여기서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 혹은 정부이다. 이 행위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효용함수, 즉 단일한 선호집합과 단일한 선택지, 그리고 각 대안으로부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예상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행동은 행위자가 처한 전략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선택된다. 행위자의 전략적 목표는 주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이 선택지를 구성한다. 선택지에 포함된 행동을 취할 경우 일련의 결과가 초래되는데 각 결과는 전략적 목표에 비추어 수익과 비용을 동반한다. 합리적 행위자는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비추어 가장 큰 효용/가치를 가져다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한 나라 혹은 그 대표가 특정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그 나라 또는 행위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선택되었다고 본다.

[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전쟁이 될까요? 우리가 바다에서 이겨 그들의 함대를 유지해주는 재원을 탈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손해만 볼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특히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될테니 명예롭게 휴전조약을 맺을 수도 없을 것이요. 아무튼 우리는 그들의 나라를 약탈하면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라는 그릇된 희망에 고무되어서는 안 되요. 오히려 나는 우리가 이 전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지 않을까 두렵소. 아테네인들은 자신만만한 만큼 자신들의 나라에 집착하거나, 신병들처럼 전쟁에 겁먹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요. 하지만 내 말은 그들이 우리 동맹국에 해를 끼쳐도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그들의 음모를 눈감아주자는 뜻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손에 무기를 들 것이 아니라 사절단을 보내 우리의 불만을 전하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들의 행위를 묵과하겠다는 뜻을 너무 분명히 밝히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벌자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해군력과 재력을 증강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헬라스인들이나 비헬라스인들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동맹국을 구해야 할 것이요.

[나] 우리는 다른 국가의 침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평화와 전쟁 중 무엇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위해 정확히 어떤 수단을 취해야 할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중략)

러시아 귀족층의 핏속에서 들끓고 있는 러시아 전제주의가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독립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부분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위험을 막아내고 우리 조국의 문명과 독립을 수호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주장해왔던 바, 독일이 위험에 처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의지를 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이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국제노동운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즉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독립 및 자국 방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변함없이 지지해온 그 신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는 모든 정복 전쟁을 비난하는 바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사민당> 성명서)

[다] 1940년에 일본은 기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1940년 7월에 나온 육군 참모부의 전략계획은 “영국과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게 명확한” 유럽에서의 전쟁종식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본은 자생적 경제력을 갖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현재의 우호적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이 시작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금수조치를 취한 후 일본의 강경파들은 일본의 취약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도조 히데키 일본 총리는 1941년 11월 12일에 당시 일본 정부 고위층이 공유하고 있던 기본적인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년 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군사적으로 사용할 석유가 남아 있지 않아 우리 해군 함정들의 발이 완전히 묶일 것이다. 또한 서남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방위력 증강, 미 해군함대의 확장,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중국과의 전쟁 등 셀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2~3년 안에 우리는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조급함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문제2 다음을 읽고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 <문제 2-4>에 답하십시오. (1000 ± 100자, 60점)

홍길동 씨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홍길동 씨는 두 가지 프로젝트 중 자신에게 가장 큰 기대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젝트를 선택한다(기대이익 = 프로젝트로부터 얻는 기대수입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비용(예를 들어 투자자금)).

프로젝트A를 수행하면 항상 확실하게 127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프로젝트B의 경우 성공과 실패확률이 0.5이며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 150원, 실패하는 경우 60원의 수입을 얻는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00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이상의 상황을 요약하여 투자자금과 수입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투자자금	성공 시 수입	실패 시 수입	성공확률
프로젝트A	100	127	-	1
프로젝트B	100	150	60	0.5

<문제 2-1> 홍길동 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할 때 홍길동 씨가 선택하는 프로젝트는 어느 것인가? 단, 홍길동 씨가 자신의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하에서는 홍길동 씨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차입에 의해 투자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하자. 투자자금을 차입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 먼저 차입금 및 이자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이 홍길동 씨의 이익이 된다. 만약 프로젝트의 수입이 차입금 및 이자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 프로젝트 수입금액 전체가 채권자에게 지불된다. 투자자금을 홍길동 씨에게 빌려주는 채권자는 홍길동 씨의 프로젝트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

<문제 2-2>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0%인 상황에서 투자자금 100원을 차입하는 경우 홍길동 씨는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가? 이때 홍길동 씨에게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의 기대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단, 채권자는 홍길동 씨 외의 다른 사람에게 100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확실하게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제 2-3>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 투자자금 100원을 차입하는 경우 홍길동 씨는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가? 채권자는 홍길동 씨에게 자금을 대여할 것인가? 단, 채권자는 홍길동 씨 외의 다른 사람에게 100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확실하게 11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제 2-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의 <자료>에 나타난 현상을 진단하고 논평하십시오.

<자료>

지난해 말(2012년 말)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9.9%, 등록 대부업체는 38.1%로 시중은행 평균(6.9%)에 견주면 5배가 넘는다. 하지만 은행의 신용차별을 받는 계층이 생계형 자금을 마련하려면 대부업체 등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계층이 빌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비중이 최근 1년 사이에 각각 0.8% 포인트, 0.9% 포인트씩 높아졌다. (중략) 저신용자들이 몰리면서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11년 말 12.1%에서 지난해 말 13.1%로, 대부업체는 8.0%에서 지난해 6월 기준 9.0%로 상승했다. 한국은행 조기경보팀 과장은 “대부업과 상호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대출액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용 양극화에 따른 부실 위험이 이들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ibhak.ssu.ac.kr